#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안

*Social (Cohesion) Indicator within the framework of ‘Social Quality’*

**이태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성장을 통해 경제규모 11위의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였다. 그러나 국민의 70%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행해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의 에너지가 양적인 성장에만 치우친 나머지 질적인 측면의 분배와 통합이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간과한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사회지표들이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사회체계요소인 개인 및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등의 접근 즉,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사회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으로 나누어 접근하고 이러한 영역에서의 균형적인 발전이 되어야 사회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는 기본방향아래 새로운 사회통합 지표를 제안하였다. 이를 통하여 그간의 사회문제에 대해 경제적이고 양적인 분석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사회의 질 관점에 의해 체계적·종합적으로 사회를 새롭게 조망해볼 수 있으며, 우리사회가 지향해야 할 사회정책의 방향설정에 대한 논의를 한층 더 발전시키리라 기대한다.

## 1. 들어가며

산업화 후발주자였던 우리나라는 지난 60여 년 동안 앞선 국가들의 몇 세기를 훌쩍 뛰어넘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속도와 성장에만 집중한 나머지 산업화에 따른 부정적 파생물들을 축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라는 조류에 편승하여 제동장치 없는 무한경쟁을 한 결과, 소득, 산업, 문화 등 많은 부문에서 삶의 질과 사회통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양극화 심화, 불평등 증대와 같은 사회적 위기에 노출되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는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크게 위협하였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위험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능력이 미흡함을 경험하게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우리사회 구성원의 70%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행해졌고, 걱정과 불안, 제도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증가한 것으로[1] 평가하고 있다.

1) 이재열(2008),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 “사회의 질” 제고를 위한 비전」,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이것은 산업화의 일천한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국가가 성장과 그 속도에만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통합과 분배라는 중요한 정책적 목표를 간과한 결과이다. 게다가 한 사회의 현상과 수준을 판단하고 전망할 수 있어야 하는 사회지표들이 대부분 양적인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어 사회의 포괄적인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선진화’라는 개념은 사회발전의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나 경제적 차원에 국한되어 복지제도의 취약성, 인적자원 배분의 왜곡, 사회·정치적 불안정, 부패와 불신, 사회적 폐쇄성 등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을 평가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다.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었던 ‘사회적 배제’ 접근보다 더 포괄적이면서 장기적인 지향성을 중시하는 요구가 커지면서 등장하게 된 ‘사회의 질’ 개념은 한 사회의 발전이 그 사회의 시민의식, 포용성과 신뢰, 문화적 수준 등 질적인 측면을 포괄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진단하며, 경험세계에 대해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사회정책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정책과정을 이론과 연계하는 특성을 가진다. 더욱이 사회적 배제가 빈곤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사회의 질은 물질적 수준의 연대와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사회의 양적인 수준과 질적인 수준을 모두 나타내며,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유용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사회의 질 접근에 주목하여 새로운 체계틀에 근거하여 사회통합지표를 개발하고, 제안하였다. 사회통합지표의 제안은 의료, 주거, 노동, 교육 등의 각 사회요소의 질적인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체계적·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사회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개발 및 사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 2. ‘사회의 질(Social Quality)’ 접근[2]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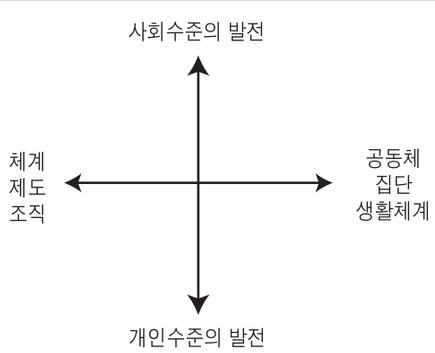
‘사회의 질’ 개념은 1990년대 유럽 사회정책 논쟁의 결과물로 실업 및 불평등 증가, 사회지출 감소 등의 정책실패 및 사회정책이 경제정책에 장기간 종속되는 현상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하였으며, 유럽연합 학자들이 사람들의 일상적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포착해내기 위해 제안한 가치부하적 개념이다. 1997년 ‘사회의 질에 관한 암스테르담 선언’에서는 1000명 이상의 유럽학자들이 서명하였으며, 현재 14개 국가에서 사회의 질 지표에 따라 사회의 질을 측정하고 있고, 네덜란드 보건복지부와 EC의 유럽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의제로 채택하고 있다.

‘사회의 질’이란 “사회복지와 개인의 잠재력을 강화하는 조건 하에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확대[3]”로 정

2) steffens et al(2005)의 “European Network on Indicators of Social Quality: Summary of the Dutch National Report”. *European Journal of Social Quality*와 이재열(2007)의 「외환위기 10년, 한국 사회의 질은 어느 수준까지 왔나」, 『외환위기 10년 평가와 사회발전 전망 : 한국사회의 도전과 대응』, 서울대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를 중심으로 재정리한것 임.

의할 수 있다. '사회의 질' 개념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간의 상시적 긴장의 함수로, 개인의 생애사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가르는 축(행위자의 구조)과, 조직화된 공식성과 친밀한 비공식적 세계를 가르는 축(체계와 생활체계)을 교차하여 다양한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 형성의 토대가 되는 자원, 연대감, 접근과 참여, 역능화의 네 가지 요소들로 이루어지며, 사회의 질적 수준은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경험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사회의 질 접근의 차원: 상호의존성과 긴장성**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목적과 요소들을 기준으로 사회발전 및 통합의 영역을 구분하면 네 가지영역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의 질 접근의 네 가지 영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안정성(Socio-Economic Security)'은 사회적 관계의 맥락에서 물질적·비물질적 자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사람들의 정도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조건이라고 할 있다. 크게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으로 구분되며, 자본(재정적 안정), 고용, 주거, 건강, 교육, 가족, 친구(사회적 관계), 여가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빈곤으로부터의 안전, 질병과 재해, 실업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포괄하며, 빈곤율, 주택보급률, 건강보험 수혜범위, 고용안정성, 산재피해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측정 할 수 있다.

'사회적 응집성(Social Cohesion)'은 사회적 관계와 이것의 토대가 되는 입법제도, 시민성과 관련된 규칙이나 가치, 관용, 존중, 다원주의 등과 같은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의 생성 및 보존, 파괴의 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 과정이란 경제적 영역에서의 불평등한 분배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적 평등과 공적·사적 부분에서의 동등한 기회 제공,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구축을 말한다. 또는 사회적 응집성을 "한 사회의 규칙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의 질 또는 그 정도"로 정의하기도 하며, 하위 영역으로 신뢰, 공통된 규칙 및 가치, 사회적 관계, 정체성 등이 있다.

3) Beck, W.A, L.J.G. van der Maesen, F. Thomese, and A.C. Walker(eds)(2001), *Social Quality: A Vision for Europ*. The Haegue, London, Boston: Kluwer Law International.

'사회적 포용성(Social Inclusion)'은 서로 상이한 사회적 관계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관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얼마나 접근가능한가를 의미한다. 사회적 포용은 참여와 자기실현, 집합적 정체성 형성의 전단계로 사회적 배제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사회적 포용의 정도는 공적연금 가입률, 남녀 간 임금격차, 노동시장 내 장기실업자 및 비자발적 비정규직 비율, 노숙자 수 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사회적 역능성(Social Empowerment)'은 개인의 역량과 능력 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동기화 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즉, "개인의 역량이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정도"를 말한다. 역능성은 사회구성원이 정치나 소속된 공동체의 주요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그러한 능력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는지를 측정하며, 하위영역으로는 문자해독률, 노조조직률, 정신병 유병률이나 자살률 등이 포함된다.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이러한 사회의 질 접근은 궁극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안정, 사회적 응집과 포용,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을 확보하여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는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추구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 사회의 질을 구성하는 영역들**

| | |
|---|---|
| **사회경제적 안정성**<br>재정자원, 주거와 환경,<br>건강과 보건, 고용, 교육 | **사회적 응집성**<br>신뢰, 규범과 가치,<br>결사체적 참여, 정체성 |
| **사회적 포용성**<br>시민권, 노동시장참여,<br>(공적/사적)서비스 혜택<br>사회적 접촉 | **사회적 역능성**<br>지식, 노동시장 참여,<br>개방성과 제도적 지원,<br>사적인 관계 |

자료: Laurent J. G. van der Maesen and Alan C. Walker(2005)

## 3. '사회의 질' 측정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개발 및 제안[4)]

지표체계의 구조설정은 지표작성의 목적에 따라 그 내용이나 체계가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사회지표체계를 구성할 때에는 사회지표의 구조화 내지는 체계화, 지표선정의 문제, 통계자료의 수준, 지표의 통계적 표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구성 원칙 아래 본 고의 지표체계 개발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첫째, 사회적 관심사들을 위에서 고찰한 '사회의 질' 접근에 따라 네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각 영역에 포함될 구체적인 주요 측면들을 여러 개의 관심영역으로 구분하였다[5)]. 이때 각 관심영역은 사회의 질을 고려한 사회통합의 본질적인 의미

4) 제안한 사회통합지표는 『사회현황 및 사회정책지표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이태진 외, 2008)』에서 제안한 지표를 재구조화하고 수정 및 보완한 것임.
5) 관심영역은 우리사회의 현상과 정책대응을 보여 주기 위해 소득, 의료, 고용 등 주요 사회정책 영역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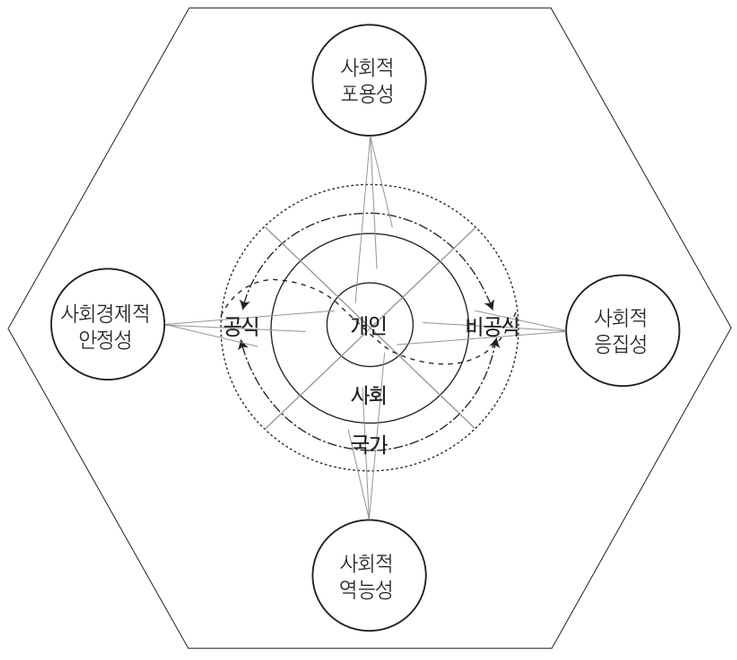
와 상호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개인적인 발전, 사회적인 발전, 국가적인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또한 제도 · 조직과 같은 공식적인 부분과 생활세계의 비공식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세부관심영역의 내용을 대표하고 그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별지표 항목을 선정하였다.

사회의 질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통합지표 체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지표 체계틀의 의미는 [그림 4]와 같이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의 각 영역에서 사회가 균형적 발전을 이루면, 사회 ·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으며, 포용성이 높고,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사회가 되며 이는 곧 사회적으로 통합이 실현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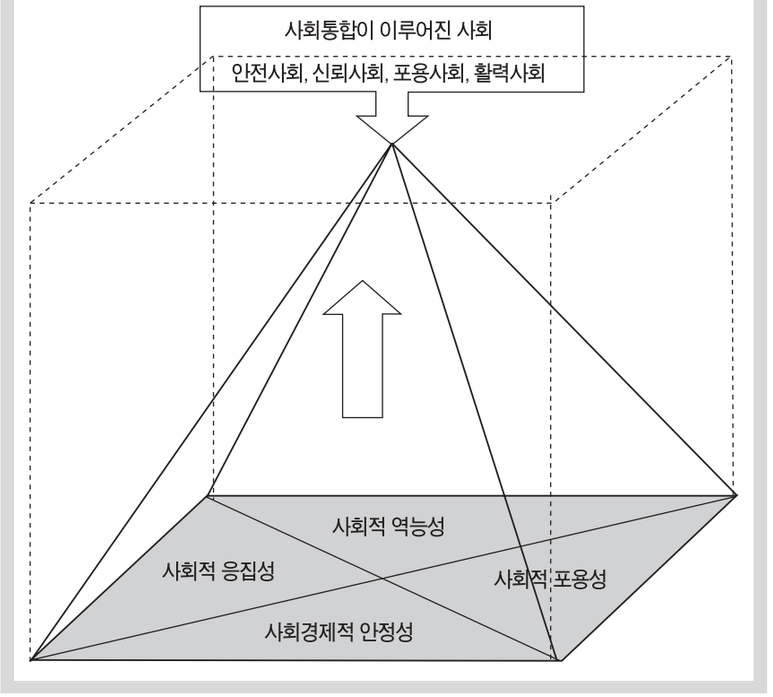
지표 체계틀 구성에 따른 세부지표의 선정은 다음과 같은 지표작성의 목적 및 원칙을 고려하여 이루어 졌다. 본 연구의 지표작성 목적은 우리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전체적인

**그림 3. 사회통합지표 체계틀**




근 정책 대상범위의 확대를 고려하여 교육, 주거, 정보, 문화를 포함함. 또한 우리사회의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반영하여 다문화, 관용, 시민참여 등을 포함함.

**그림 4. 사회통합지표 체계 의미**




사회통합수준을 보여줄 수 있으며, 외국과의 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표는 현실성(Reality), 국민수용성(Acceptability), 포괄성 및 정책적 비교가능성(Comparative possibility), 객관성(Objectiveness)을 지녀야 하며, 사회통합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과정과 결과를 모두 반영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구성되어야 하며, 사회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측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한 개인의 출생부터 노년기까지를 포괄하는 생애사적 관점을 취해야 하며, 미래를 예측하고, 이후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을 기존으로 하여 기존에 국내 및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표들에 대한 이론검토, 각 영역별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의 방법을 사용하여 <표 1>과 같이 지표를 선정하였다[6].

6) 본 원고에서 제안하고 있는 지표는 각 영역에 대한 대표성, 국제비교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고, 실태분석 시 통계자료 확보의 한계로 인해 영역별 지표 수가 일정한 비율로 선정되지 못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본 지표는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대체 가능함.

**표 1. 사회의 질 접근에 따른 사회통합지표 제안**

| 영역 | 관심영역 | 사회통합지표 | |
|---|---|---|---|
| 사회·경제적 안정성 | 소득보장 | –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 | – 국민연금 수급자 |
| | | – 지니계수 |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 | 의료보장 | – 건강보험 · 의료급여 수혜율 | – 인구 천명당 의사 수 |
| | | – 의료비 본인 부담률 | – 영아사망률 |
| | 주거안정 | – 인구 천명당 주택 수 | – GDP 대비 주거급여 예산 비율 |
| | | – 임차(전 · 월세) 가구비율 | – 주택투자율 |
| | |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 – 1방당 거주인 수 |
| | | – 월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 – 시설보급률 |
| | 고용안정 | – 고용률 | – 고용보험가입률 |
| | | – 실업률 | – 산재보험가입률 |
| | | – 연평균 근로시간 | – 실업급여수혜율 |
| | | – 임금수준 및 격차 | –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
| | 교육보육 기회안정 | – 취학률 | – 학생1인당 공교육비 |
| | | – 학업중단율 | – 교육급여 예산 |
| | | – 보육률 | – 보육료예산 |
| | | – 국공립보육시설 비율 | |
| 사회적 응집성 | 다문화 수용 | – 국제결혼비율 | – 결혼이민자가족 지원 실적 |
| | 사회참여 | – 복지인식 | – 투표율 |
| | | – 국세체납률 | |
| | 협력 | – 사회단체 참여현황 | – 자원봉사센터 운영규모 및 예산 |
| | | – 자원봉사활동현황 | |
| | 결속력 | – 이혼율 | – 가정폭력 피해자 · 가해자 지원실적 |
| | | – 한부모 가족비율 |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수 및 예산 |
| | | –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자 수 | – 한부모 가족지원 예산 |
| | 신뢰성 | – 부패인식정도(CPI) | |
| 사회적 포용성 | 소득분배 | – 노인, 아동 빈곤율 | – 보육아동 대상자 |
| | | – 노후소득보장률 |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 | 사회서비스 수준 | – 상급학교 진학률 |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사업 예산 |
| | | – 특수교육 규모 | – 특수교육 예산 |
| | | – 노숙인 규모 | – 노숙인 지원 사업 예산 |
| | | – 취약계층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율 | – 노인 및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예산 |
| | | – 비정규직 비율 | –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동률 |
| | | – 비경제활동인구 비율 | –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



〈표 1〉 계속

| 영역 | 관심영역 | 사회통합지표 | |
|---|---|---|---|
| 사회적 역능성 | 인적자원개발 | – 학업성취도(국내, PISA) | – GDP 대비 공부담 공교육비 비율 |
| | | – 평생교육기관 | – 교원 1인당 학생 수 |
| | | –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학교 현황 | – 아동발달지원계좌(CDA) 예산 |
| | 노동역능성 | –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 | – GDP대비 노동시장 공공지출 |
| | | – 근로자 직무관련 훈련 참여율 | – 보육사업 예산 |
| | | – 가족친화지수(FFI) | |
| | 사회심리적 역능성 | –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 – 정신보건사업 예산 |
| | | – 자살률 | |
| | 정보역능성 | – 국가정보화 지수 | – 인터넷 이용률, 이용목적 |
| | | – 컴퓨터 보유 가구 비율 | – 정보격차 지수 |
| | | – 인터넷 가입 가구 비율 | – 주요국가의 정보격차 |
| | | – 이동전화 가입자수 | – 정보역능성 관련예산 |
| | 문화역능성 | – 도서관 1관당 인구수 | – 국민문화비지출비중 |
| | | – 박물관1관당 인구수 | – 공공문화비지출비중 |
| | | – 1인당 생활체육시설면적 | – 지역별 · 소득별 월평균 문화비지출 격차 |
| | | – 예술행사관람률 | – 문화적역능성 관련 예산 |
| | | – 문화시설이용률 | – 생활체육참여율 |

## 4. 맺으며

본 고에서는 사회의 질 접근을 활용하여 우리사회의 사회통합정도와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통합지표를 제안하였다. 지표의 제안에 앞서 사회의 질 접근에 대한 이론검토를 하였으며, 지표제안을 위한 원칙을 설정하고, 지표체계의 틀과 의미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네 개의 영역을 관심역역에 따라 하위 영역으로 재구분한 후 각 하위 영역별로 대표 지표들을 제안하였다.

사회의 질 접근에 따른 사회통합지표의 제안은 기존 지표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사회의 발전정도를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들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으며, 경험적으로 사회통합수준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 접근이 가치부하적 개념이라는 특성에 따라 지표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향점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제안하고 있는 지표들은 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에는 통계조사자료의 부족, 국제비교의 한계, 해석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 하지만 후속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사회의 질 관점에 관심을 갖고, 사회통합지표들을 추가 개발한다면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보다 풍부해 질 것이며, 사회통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본 고에서 제안한 지표제안에 향후 새롭게 개발되어야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지표들을 제안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먼저, 사회경제적 안정성 영역에서는 소득보장영역에 최저생계비관련 지표를, 의료보장영역에 저체중아 출생률, 병원까지의 평균거리, 응급의료체계 반응시간관련 지표를, 주거안정영역에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주택의 노후정도, 임대주택 대기시간관련 지표를, 고용안정영역에 취업자 구성비, 최저임금, 저임금 근로자 상향이동률,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수 및 예산관련 지표 등의 개발을 제안한다.

사회적 응집성 영역에서는 다문화수용영역에 다문화에 대한 국민인식향상을 위한 정책관련 지표를, 사회참여영역에 사회구성원의 조세부담정도 및 이행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복지인식지표를, 결속력 영역에 다양한 형태의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와 관련 정책수준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신뢰영역에 우리사회의 일반화된 신뢰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등의 개발을 제안한다.

사회적 응집성 영역은 제안한 지표들이 대부분 양적인 지표에 국한되어있고,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가 거의 없다. 따라서 국제비교가 가능하고 시계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발을 제안한다.

사회적 포용성 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에서 중증 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 및 관련 정책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증가하는 보호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평균 대기시간관련 지표, 전반적인 주거취약계층의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통합 지표, 저소득층을 위한 교육비 지원 관련 지표, 특수교육대상아동취학률지표, 저임금근로자비율지표, 고용 및 임금에서의 남녀 차별 지표 등의 개발을 제안한다.

사회적 역능성 영역에서는 노동영역에 산전후 휴가 사용, 육아장려금, 가족친화기업,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한 지표를, 사회심리영역에 계층 상승 이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정보영역에 정보활용역량 관련 지표를, 문화영역에 문화예술 교육경험, 지역축제, 국민문화 향유율과 관련한 지표의 개발을 제안한다.

우리는 현재 세계적 금융위기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불과 10년 만에 또 다시 커다란 위기에 놓여 있다. 성장을 통한 고용과 복지의 시스템이 무너진 상황에서 경제위기는 수많은 빈곤계층을 양산하고 사회적 배제의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이주노동자 유입, 국제결혼율 증가로 인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통합을 위협하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속적으로 풍부한 지표개발 및 통계자료 생산이 필요하다. 보건복지